

전문가교칭

청탁금지법은 성공할 것인가?



홍 성 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사회 부패의 핵심은 사회문화적 요인, 이른바 '관행'의 문제다. 연줄을 이용한 각종 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이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다. 법적 규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은 '대가성' 여부였다. 이를테면, 공직자가 돈을 받은 '대가로'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을 때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했고, 그 빈틈을 노리고 다양한 형태의 금품수수와 향응제공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대가성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직무수행에 영향을 준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설사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관행 자체가 직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 금품수수와 향응제공이 만연한 현실에서 직무수행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기존 법규제의 빈틈을 틀어막는 것을 목표로 탄생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하게 청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며, 청탁이 실제 직무수행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즉,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며, 이때 대가성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 만원 규정은 최소한의 예외조항일 뿐이다. 대가성은 물론 직무관련성조차 없어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수수는 무조건 금지다.

이 법이 과연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사실 법사회학을 전공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법 자체로만 보면 법집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입법과정을 거치면서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졌는데, 법집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 또한 마이너스요인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당거래'를

사정당국이 물샷틈없이 적발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나갈 편법을 벌써부터 생각하거나, '접대비실명제'처럼 결국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은 두 가지 점을 놓치고 있다. 하나는 신고체계다. 언론에 잘 보도되진 않았지만, 청탁금지법은 당사자가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신경을 무척 많이 쓴 법이다. 일단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징계·처벌한다. 심지어 배우자의 금품수수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를 보호하거나 보상하는 규정을 두었고, 신고 후 처리 절차도 법제화하였다. 금품제공자가 언제든 변심하여 제보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한, 공직자 입장에서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거절하거나 자진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신고시스템이 정비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동기가 더욱 분명해졌다.

또 한 가지는 법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보여준 국민들의 반응은 무척 뜨거웠다. 이번만큼은 부정부패적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시민사회가 이 법을 유명무실하게 방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7년 대선을 눈앞에 둔 정치권은 시민의 지지를 얻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나설 가능성이 크다. 편법이 난무하게 방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부정부패는 관행의 문제일 뿐이고, 금품수수나 향응제공 없이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새로운 관행이 정착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실패를 예상하고 과거의 관행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 가는데 협조하고,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리스크에 민감한 기업의 입장에서 어느 쪽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졌다. 부패가 당연시되던 과거의 관행과 작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경萬里

:: 국 내 ::

1. 폭스바겐 인증취소 · 판매정지, 과징금 178억원 부과로 퇴출위기



8월 2일 환경부는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 성적서 위조를 이유로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천대에 인증취소 · 판매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을 합치면 총 판매차량의 70%가 판매금지 목록에 올라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려있다. 또한 환경부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조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178억원 부과를 결정했는데, 이는 최대 3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이 부과되리라 예상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7월28일부터 차종 당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지만 폭스바겐은 3일 앞서 전격 판매중단을 선언하면서 100억원 한도를 피할 수 있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2/0200000000AKR201608020402000041HTML?input=1179m>
<http://www.hanjo.co.kr/atl/economy/car/754861.html>

2. 한국노바티스, 25억원대 불법리베이트 '곰수'

8월 11일 한국노바티스 임직원이 자사 제품을 써달라며 의사들에게 25억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의학전문지나 학술



지에 제품 광고비 등으로 총 181억원을 준 뒤 이 매체들을 통해 의사들에게 거마비, 원고료, 강연료 명목으로 25억9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로 리베이트 제공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자, 더욱 교묘하게 의사들에게 뒷돈을 주는 탈법 '곰수'를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노바티스는 '한국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일'이며 개인의 일탈이지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유감을 표명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0/0200000000AKR201608101588000171HTML?input=1179m>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2524574

:: 해 외 ::

1. 2016 APEC, 기업 컴플라이언스 워크숍 개최

8월 15일 페루 리마에서 18개 회원국 참여하에 개최된 APEC 제23차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및 워크숍에서는 태국, 페루, 베트남, 러시아, 한국, 미국 등 반부패 협약 이행 활동에 대한 각국의 보고가 있었다. 또한 국제상거래에서 뇌물을 예방하고 탐지하기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각국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인센티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한편 APEC 주최국인 페루는 올해 4월 기업 뇌물과 관련하여 법인에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통과되어 2017년 발효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 영국 SFO, 에어버스 사기혐의 수사



8월 7일 영국 중대범죄 수사청(SFO)은 프랑스 항공기업체 에어버스의 수출신용과 관련된 사기 및 뇌물 혐의를 잡고 수사에 돌입했다. SFO는 에어버스 해외 영업의 에이전트 운영

실태 조사에서 수출신용장에 허위정보를 적거나 정보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년간 이를 추적해왔다. 수출신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에어버스와 거래사간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영업 · 주주 활동에서 에이전트 활용은 반(反)부패 사정대상이 되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방위산업 등 일부 업계에서는 여전히 외부 업체를 끼지 않고는 영업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범죄 수사가 수년간 이어질 수 있고 프랑스, 독일 당국도 비슷한 조처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번 일은 유럽 제조사인 에어버스에 큰 타격이 되는 동시에 미국 경쟁사인 보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망했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1/0200000000AKR201607212018000881HTML?input=1179m>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6321&ref=D>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윤리 일문일답

—問—答—

Q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 대한 법인데, 일반기업도 신경 써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제재가 가장 크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민간인이 처벌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민간인이 공무수행사인인 경우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공직자와 동일하게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게 되며, 후자의 경우 제공자로서 처벌 받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니까 기업과는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지시 하에 진행되었든, 그렇지 않은 기업까지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임직원에게 청탁금지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 중 누군가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기업이 청탁금지법 준수를 위해 노력을 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직원 교육에 더욱 힘써야 하겠죠?



청탁금지법과 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올해 하반기 최대의 이슈인 청탁금지법이 입법목적으로 충실하게 자리 잡는다면,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 근절되고, 언론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견제하며,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바람직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에는 청탁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법인 및 단체에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면책을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9월중 뇌물방지경영시스템 표준 'ISO 37001'을 공식 발간할 예정인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반부패 노력은 세계적 흐름이자 기업시민의 최우선 덕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ISO 37001은 뇌물의 예방·감지·해결에 대한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뇌물수수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게 돕는다.

ISO 37001은 어떤 표준인가?

2013년 영국표준화기구(BSI) 주도로 프로젝트위원회(ISO/PC278)를 구성하여 국제 뇌물방지경영시스템 표준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36개 직접참여국, 21개 참관국가에서 온 80여 명의 전문가들과 OECD와 국제투명성기구(TI)를 포함한 7개 연락기구가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였다. 9월 최종안 검토 및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일반에게 공표될 예정이다. ISO 37001은 모든 조직 활동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 위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절차 및 통제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 섹터 등 어떤 형태의 조직이나 중소기업 및 대규모 조직 등 어떤 규모의 조직에서도 그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직 내 임직원의 직접적인 뇌물수수나 조직 에이전시 또는 제3자에 의한 간접적인 뇌물수수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ISO 37001은 뇌물에 국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사기, 반독점/공정경쟁위반, 돈세탁 등 다른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조직이 포괄적인 리스크관리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ISO 37001이 필요로 하는 조치들

ISO 37001은 조직이 직면한 뇌물수수위험에 비해 합리적 방식으로 지정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뇌물방지 정책 및 프로그램 이행, △모든 관련 직원 및 조직(벤처 파트너, 하청업체, 공급

업체, 컨설턴트 등)에 정책 및 프로그램 알리기,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컴플라이언스 관리자 임명, △직원에게 적절한 뇌물방지교육, △뇌물수수의 위험성 평가, △적절한 뇌물방지컨트롤을 실행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 △직원의 뇌물방지정책 준수상태 확인, △선물, 접대, 기부 등이 부패목적이 없도록 통제, △뇌물수수의 위험방지를 위한 적절한 금융, 조달, 계약 및 기타 상업관리의 실현, △보고절차 및 내부고발 이행, △실제 뇌물수수와 의심상황에 대한 적절한 조사 및 처리,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 모색 등이 ISO 37001 실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용들이다.

ISO 37001을 도입하면 경영상 어떤 장점이 있는가?

최근 국제적 추세는 효과적인 뇌물방지규정의 채택을 요구하거나 뇌물방지경영시스템 마련에 따른 조직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ISO 37001의 도입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고, 경영상의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우선 조직이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이행하는 것을 돕고 현재 보유한 통제조치를 강화시킨다. 둘째, 임직원 및 투자자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뇌물통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관행을 받아들이고 이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셋째, 뇌물수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기관 혹은 법원에 조직이 뇌물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와 단계를 밟아왔다는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한편, 조직의 수익 및 비용이란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SO 37001 도입으로 조직의 뇌물수수 예방 및 감지 능력이 향상된다면, 뇌물수수와 관련된 직접적 비용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혐의의 정부조사로 발생할 변호사/법정회계사/전자 검색전문가 고용의 간접적 비용 모두를 줄일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대의 ISO 37001

청탁금지법 시대에 대부분의 조직은 뇌물방지 시스템 및 프로세스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이다. 최고경영진은 뇌물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대내외에 공표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순수 실천해야 한다. ISO 37001 인증은 불필요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뇌물수수위험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조직의 규모와 구조, 조직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조직 활동의 내용에 따른 맞춤형 설정이 가능한 ISO 37001 조직의 클린경영시스템 확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뇌물방지경영시스템을 장려하는 것은 부패가 비용을 높인다는 판단 때문이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뇌물이 전체 사업비용을 1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잘 관리되는 윤리경영조직은 효과적인 품질, 환경 및 안전 관리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쉽고, 또한 효과적인 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인증을 획득해 청탁금지법 시대에 경쟁력을 이어갈 것이다. ISO 37001 인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모든 조직의 윤리경영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민간기업의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작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내기업이 반부패 트렌드의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도 ISO 37001은 반부패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으로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독자에게 물어드립니다

Q1.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내부에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Q2. 청탁금지법에 대해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 기존 법규인 약사법, 의료법과 상충되는 기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의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제약회사 K주임

- 그동안 뿌리 깊었던 접대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대관업무나 언론을 상대로 한 홍보 업무 관행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마다 고민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사회 접대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얼마간 시행착오나 일부업종위축 같은 경제에 부정적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사 C부장

-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뇌물수수, 청탁금지 등을 늘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다. 이미 관련된 규정을 회사 행동강령에서 정의하여 지키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법조문과 자정의 노력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협력사와 관련 인허가 기관과의 만남이 한동안은 꺼려질 것이 라는 것이 (동료들) 대다수의 생각과 의견이다.

- 처음 정착단계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윤리경영과 청렴을 한 단계 높여 국가 경쟁력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점차 개인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동양적 '정'이라는 관점에서 만남 등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교육서비스회사 K팀장

-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꾸준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거래처 접대 등의 관련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 하고 재검토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으로 과도한 접대문화만큼은 해소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윤리경영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상운송회사 J부장

- 청탁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사내 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련하여 관행으로 이어져오던 일들이 사라지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 C매니

-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있다. 규정을 제정중이고 전구성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 청탁금지법은 올바른 선진국 사회로 진입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 K교수

행사소개

2016년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Eco-Expo Korea 2016)

최고의친환경 생활 및 산업 종합박람회로서, 각 분야의 환경경영 소통과 협력의 장

주최 : 환경부

일시 : 2016년 10월 18-21일

장소 : 서울 코엑스 C&D 홀

제3회 청년 CSR 회의 (Youth-CSR Conference)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제고

주최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일시 : 2016년 10월 1일

장소 : 서울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백악관

국내행사 국외행사

London Compliance & Ethics Forum (런던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윤리 포럼)

기업의 청렴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도자를 초청하여 논의

주최 : Ethisphere

일시 : 2016년 10월 11일

장소 : Arundel House, London

GCN Unternehmenscoaching "Einführung Corporate Carbon Footprint" (기업코칭, '탄소발자국도입')

기업의 탄소발자국 및 환경경영 영역의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기업을 코칭

주최 : Deutsches Global Compact Netzwerk (DGCN)

일시 : 2016년 10월 13일

장소 : Reichpietschufer 20, Berlin

윤리 수다

글로벌 반부패 규정

오늘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반부패 법안인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앞서 해외에서는 어떤 반부패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미국의 FCPA

글로벌 반부패 규정의 대표격으로 뽑을 수 있는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는 미국에서 1977년 제정된 법안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를 금지하는 법률이다.

록히드 사건

1976년,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가 마루베니 상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고관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 금액은 무려 200만 달러. 이 사건으로 인해 마루베니, 젠니구 등 고관이 체포되었고, 몇 달 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도 5억 엔을 받고 전일본항공에 록히드 항공기를 구입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해외 부패를 단속하는 FCPA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말의 연관성만 있다면

미국의 EPC(설계·조달·시공)전문업체 KBR은 2000년대 초, 나이지리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2009년 사업 이익금 1억 7700만 달러를 몰수당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KBR의 나이지리아 사업 파트너였던 프랑스의 테크넵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지도 않았지만 FCPA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고, 사업에 참여한 일본가스공사도 뉴욕 소재 은행의 계좌를 통해 불법자금을 지급하여 벌금을 물었다.

영국의 Bribery Act

영국은 OECD에서 제정한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2010년, Bribery Act라는 반부패 법안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Bribery Act 역시 FCPA와 마찬가지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GSK의 배신

영국의 SFO(Serious Fraud Office)는 영국의 최대 제약 회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Glaxo Smith Kline, GSK) 전 중국지사장 및 직원들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GSK에서 중국의 의사들에게 30억 위안을 지급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GSK에서 윤리적 경영을 선포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GSK는 이것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며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해왔음을 주장했다.



사기꾼의 말로

농업에너지 회사 SAE(Sustainable Agro Energy)의 케리 웨스트는 스튜어트 스톤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서류조작에 가담했다.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보험이 있으니 걱정 말라며 캄보디아의 녹색 바이오연료 농장에 투자하도록 종용하였다. 물론 사기였다. 하지만 곧 두 사람은 영국의 SFO에 체포되었고, Bribery Act 위반으로 각각 13년과 6년의 징역과 15년과 10년 동안 영국 관련 회사의 이사회 책임 금지를 선고 받았다.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매년 국가청렴도 top10을 벗어나질 않는, 청렴선진국으로 유명한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은 범국가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국의 공직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된다.

POCA(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60년, 리관유 총리는 1937년 제정된 POCA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으로 뇌물의 정의를 확대하고, 집행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CPIB, 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은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의자와 가족, 대리인의 은행장부까지도 조사할 수 있고, 민간부분에서도 POCA에 저촉되는 정보나 혐의가 있다면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수입보다 더 큰 부를 소유한 경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것만으로도 뇌물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에 대한 대우를 높이자 뇌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지식노트



청탁금지법

2010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벤츠검사 사건.

내연관계였던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선물은 뇌물이 아닌 사랑의 증표로 간주되고, 결국 대가성 없는 금품으로 이들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들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사이 제안된 '청탁금지법', 대가성과 무관하게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전에 없이 강력한 법안!

2015년 3월 27일,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었고,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힘있는 사람에게
청탁하는 풍조를
개선하려는 건가요?

네,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질적인 청탁문화를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개입

불법
인허가·면허
등 처리

법령을 위반한
행정처분·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위법사항 묵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 업무 개입

부정청탁의 행위유형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한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특정인의
계약 선정 또는
탈락에 개입

위 14가지의 유형에 대한 공직자들의 지위·권한 남용

예외사유로 7개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하였습니다

- 1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3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예외사유도
있나요?

7가지의
예외사유가
있어요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매번
감사합니다

이정도
금품이면
괜찮을 겁니다

안돼요!!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

이것이 ~
금품등 수수예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8가지가 있습니다

- 1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사고·의례·부조 목적
으로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친척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직무 관련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
-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결혼을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맛·취·보·세·요

다음 중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①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
- ②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환경단체 내 위원회의 위원
- ③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를 하는 개인

- 지난 호 정답 : ④ 지속성 유지를 위한 계속적 학습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gukmin@korea.kr)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5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임형재님, 손지현님, 김희석님, 서동욱님,
김인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